



# 국제통화기금(IMF)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최 원 선임연구원

■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 전망 수정보고서를 통하여 2013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3.3%에서 3.1%로 0.2%p 하향 조정하는 한편, 2014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4.0%에서 3.8%로 0.2%p 하향 조정함.<sup>1)</sup>

- 국제통화기금은 전망치 하향 조정의 이유로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 신흥국 성장률 둔화, 유로존 경기침체 심화, 미국 예산삭감 조치에 따른 성장 속도 둔화 등을 제시함.
-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8.1%에서 7.8%로 0.3%p 낮추었으며, 러시아, 브라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각각 3.4%에서 2.5%, 3.0%에서 2.5%로 하향 조정함.
- 미국과 독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1.9%에서 1.7%, 0.6%에서 0.3%로 하향 조정함.
- 반면, 일본의 경우 강력한 경기부양책으로 인한 내수회복 및 수출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1.5% 보다 0.5%p 상향 조정된 2.0% 성장을 전망함.

〈표 1〉 국제통화기금의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p)

구분	세계경제	선진국	미국	독일	일본	신흥국	중국	러시아	브라질
2013년 4월 전망(A)	3.3	1.3	1.9	0.6	1.5	5.3	8.1	3.4	3.0
2013년 7월 전망(B)	3.1	1.2	1.7	0.3	2.0	5.0	7.8	2.5	2.5
차이(B-A)	-0.2	-0.1	-0.2	-0.3	0.5	-0.3	-0.3	-0.9	-0.5

자료: 국제통화기금.

■ 특히, 국제통화기금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여 신흥국 경기 둔화세가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

1) 이번 수정 전망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수정은 포함되지 않음.

-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출구전략 시행과 관련한 논란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자본유출을 방어하기 위한 신흥국들의 금융긴축 정책 시행 가능성이 높아 신흥국 경기 둔화세가 예상된다고 설명함.
  - 또한, 전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인한 신흥국 내수경기 침체, 최대 규모의 원자재 수요국인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 둔화에 따른 글로벌 원자재 가격 하락, 출구전략 시행 논란 등에 따른 신용대출 축소 가능성 등이 신흥국 경기 둔화세를 장기화시킬 수 있다고 예상함.
- 한편, 기존 전망에서의 예상과는 달리 중국의 6월 수출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6월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1% 감소한 1,743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 1월 이후 17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나타냄.
  - 중국 수출 부진은 일본 정부의 ‘아베노믹스2’ 정책으로 엔화 대비 위안화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일본 무역량이 감소하고 유로존 재정위기로 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임.
    - 2013년 상반기 중국과 일본의 무역총액은 1,469억 2,000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9.3% 줄어들었으며, 중국과 EU의 무역총액은 2,592억 1,000만 달러로 3.1% 감소함.
  - 일부 전문가들은 2013년 하반기에도 ‘아베노믹스’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과 EU 간 무역과 관련한 통상마찰 확대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어 중국 수출의 빠른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함.
-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의 완전한 회복세를 시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신흥국들의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 국제통화기금은 미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와 관련하여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는 한 금융완화 정책 지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출구전략 시기는 금융시장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선진국의 경우 세계 경제회복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단기적인 경기회복 정책을 추진함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국가부채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신흥국의 경우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 정책 등이 요구된다고 밝힘.

(IMF, Financial Times 등)

2) 일본 정부는 물가상승률 2%를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경기부양과 양적완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